

사업용 차량 과속 · 졸음운전 단속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휴게시간 보장 준수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 등 확인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해 노상(고속도로 포함)이나 차고지 등 현장에서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준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공단은 전북도·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최소휴게시간 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는 업종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초과 운행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농어촌·마을버스는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의·고속버스·전세버스는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화물자동차는 올해 1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운행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으로 인해 5시간 연속운행할 경우에는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지자체와 함께 시외버스, 전세버스 및 화물차량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운행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 보장여부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행 전 음주여부와 운송 자격 취득여부 등도 살펴본다.

교통안전공단 송병호 지사장은 "버스가나 화물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라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하계 휴가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3년 후 2배,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 모집

전주시, 오늘부터 11일까지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II 신규가입 대상자를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희망키움통장II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이 추가로 지원되는 통장으로, 3년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절차는 근로활동 확인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

담한 후 신청하면 되며,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입 후 3년 동안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비, 본인 및 자녀 교육, 기술훈련비,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현재 희망키움통장II 유지자는 715명"이라며, "가입, 유지, 만기시 해지 조건이 쉬운 희망키움통장II 가입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벚지환원사업 지원 신청접수

이달 말까지... 농가당 0.1~3ha · 1ha당 최대 20만원 지원

전주시가 장시간 화학 비료를 사용해 지력이 떨어진 농지를 회복시켜 고품질 전주쌀 생산을 돕기로 했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벚지환원(지력증진) 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한달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벚지환원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화학 비료 사용 등으로 지력이 떨어진 농지에 벚지을 잘게 잘라 가을갈이를 실시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0.1~3ha로, 지원 단가는 1ha당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전북도내 농지에 벚지 살재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벚지환원사업 보

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오는 31일까지 벚지환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8월에 벚지환원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오는 11월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관계 공무원의 사업완료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이라며 "부적격 판정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을갈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벚지환원 사업을 신청한 1,195농가에 1억4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벚지환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69)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해경, 테트라포드 출입자제 당부

방파제 구조물 테트라포드(다리 넷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의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출입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9시45분경 전북 군산시 비응동동 비응항 방파제에서 최모(52·여)씨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해경과 119가 긴급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는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한 최씨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다행히 최씨는 큰 부상 없이 머리와 다리에 할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장 현 기자



정현을 익산 시장의 기자회견 장면

정현을 “경찰 짜맞추기식 수사다” 강력 반발

“인권침해 ·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허위 진술 관련자 무고죄 고소하겠다”

유품 휴친 업체 직원 2명 입건

유품정리대행업체 직원 2명이 고인의 유품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31일 특수절도 혐의로 A(43,남)씨와 B(50,남)씨를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 오전 9시 2분께 김제시 환산면 한 기사식당에 주차된 고인의 차량에서 100만원 상당의 낚시대 2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품을 정리해주는 업체 직원으로 이 날에도 고인의 차에 있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트렁크에 있던 낚시대를 훔쳤다.

이들의 범행은 고인의 누나 C씨가 낚시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 끝에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전북경찰청의 일방적 수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시장은 지난 3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학금의 '장' 자도 꺼낸 적 없는 나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경찰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한 번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졸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수사상황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관해 "이 사건과 관련해 석산업자와 공무원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석상채

석 중지처분 명령 후 시나리오를 짜서 각본을 만들었다. 장학금을 1억원 갖고 오라고 했는데 1000만원을 주니까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수사가 증거 없이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허위 진술한 관련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익산 사랑 장학금 모금과 관련해 한 점 부끄럽지 않고 결백하다"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간부공무원인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다른 공무원인 C국장을 통해 익산시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을 기탁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 시장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민 기자 ·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시, 체납정리단 · 멘토링 운영 성과

상반기 징수액 전년 대비 115억 증가 · 체납액 40억 감소

전주시가 올 상반기 동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시가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정리 원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체납정리 전문단과 멘토링제를 운영한 성과물이다.

세외수입은 조세에 비해 낮은 납세의식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징수액이 115억원이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40억원 감소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 징수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정리전문단(전주시체납정리)을 편성해 세외수입 1억원 이상인 체납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실시했

으며,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된 세외수입 72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시 내부행정망에 '세외수입 징수업무 공유시스템'을 개설하고 부과·징수 매뉴얼과 체납처분 절차, 징수업무 질의답변 사항을 공유해 체납 징수 담당자간 온라인 협업을 통해 업무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그 영역과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라며 "세외수입부서의 꾸준한 업무 공유와 협업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